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

일본 정부 납치문제 대책본부

모든 납치피해자의 귀국을 목표로!

1970년대부터 80년대에 걸쳐 많은 일본인이 북한에 납치되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17명을 납치피해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이 밖에도 납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례가 있습니다.

북한은 2002년 9월, 일본인 납치를 처음으로 인정하고 다음 달, 5명의 납치피해자가 귀국했으나, 그 밖의 피해자에 관해서는 아직 북한으로부터 안부에 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습니다.

납치문제는 일본의 주권 및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중대한 문제입니다. 납치문제의 해결 없이 북한과의 국교정상화는 있을 수 없다는 방침을 견지하고, 납치피해자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납치피해자의 안전 확보 및 즉각적 귀국, 납치에 관한 진상규명과 납치실행법의 인도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인정한 납치피해자 17명

1 1977년 9월 19일/이시카와현에서 납치



구메 유타카 씨 (당시 52세)

▶ 안부 미확인
(북한은 입국 사실 부정)

2 1977년 10월 21일/돗토리현에서 납치



마쓰모토 교코 씨 (당시 29세)

▶ 안부 미확인
(북한은 입국 사실 부정)

3 1977년 11월 15일/니가타현에서 납치



요코타 메구미 씨 (당시 13세)

▶ 안부 미확인
(북한은 '자살했다'고 주장)

※요코타 메구미 씨는 북한에 딸(김은경 씨)이 있음

4 1978년 6월경/효고현에서 납치



다나카 미노루 씨 (당시 28세)

▶ 안부 미확인
(북한은 입국 사실 부정)

5 1978년 6월경/납치장소 불분명



다구치 아에코 씨 (당시 22세)

▶ 안부 미확인
(북한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주장)

6 1978년 7월 7일/후쿠이현에서 납치



지무라 야스시 씨 (당시 23세)

▶ 2002년 10월 귀국

(구성(舊姓):하마모토)



지무라 후키에 씨 (당시 23세)

▶ 2002년 10월 귀국

7 1978년 7월 31일/니가타현에서 납치



하스이케 가오루 씨 (당시 20세)

▶ 2002년 10월 귀국

(구성(舊姓):오쿠도)



하스이케 유키코 씨 (당시 22세)

▶ 2002년 10월 귀국

8 1978년 8월 12일/가고시마현에서 납치



이치카와 슈이치 씨 (당시 23세)

▶ 안부 미확인
(북한은 '해수욕 도중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주장)



마쓰모토 루미코 씨 (당시 24세)

▶ 안부 미확인
(북한은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주장)

10 1980년 5월경/유럽에서 납치



이시오카 도오루 씨 (당시 22세)

▶ 안부 미확인
(북한은 '가스사고로 사망했다'고 주장)



마쓰키 가오루 씨 (당시 26세)

▶ 안부 미확인
(북한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주장)

9 1978년 8월 12일/니가타현에서 납치



소가 히토미 씨 (당시 19세)

▶ 2002년 10월 귀국

11 1980년 6월 중순/미야기현에서 납치



하라 다다아키 씨 (당시 43세)

▶ 안부 미확인
(북한은 '간경변으로 사망했다'고 주장)

12 1983년 7월경/유럽에서 납치



아리모토 게이코 씨 (당시 23세)

▶ 안부 미확인
(북한은 '가스사고로 사망했다'고 주장)

※●안의 숫자는 4페이지 지도 안의 번호와 대응됩니다.

납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안 877명

현재 일본 정부는 북한에 납치된 피해자로 위의 17명을 인정하고 있지만, 그에 더해 북한에 의한 납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안으로서, 행방불명자 877명(2015년 10

월 1일 현재)에 관하여 국내외에서의 정보수집, 수사 및 조사를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국가, 국민 전체의 힘을 모아 북한에 대하여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납치피해자를 한 시라도 빨리 귀국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납치문제에 관하여

1970년대부터 1980년대에 걸쳐 많은 일본인이 부자연스러운 형태로 종적을 감추었으며, 이들 사건에는 많은 경우, 북한에 의한 납치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17명을 북한에 의한 납치피해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이 밖에도 납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례가 있습니다.

2002년 9월에 북한이 일본인 납치를 처음으로 인정하고, 같은 해 10월에 5명의 납치피해자가 24년 만에 귀국했습니다만, 그 밖의 피해자에 관해서는 아직 북한으로부터 안부에 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습니다. 남겨진 피해자들은 지금도 모든 자유를 빼앗긴 채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북한에 갇혀 있으며 현재도 구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는 일본의 주권 및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중대한 문제이며 북한에 남겨진 모든 납치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신속히 일본으로 데려와야만 합니다.



북일 간의 주요 동향

북한, 모든 일본인에 관한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조사 개시

2002년 9월에 열린 제1차 북일 정상회담에서 북한은 납치피해자에 관하여 '5명 생존, 8명 사망, 2명은 입국한 사실 없음'이라고 일본 측에 전했으며 같은 해 10월, 일본 정부의 요구에 응하여 생존이 확인된 5명의 납치피해자가 귀국했습니다.

2004년 5월에 열린 제2차 북일 정상회담을 통해, 귀국한 피해자 5명의 가족들도 귀국 또는 방일하였습니다.

하지만, 2002년 9월에 북한으로부터 마쓰키 가오루 씨의 '유골' 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제공된 것이 법의학적 감정 결과 다른 사람의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 외에도 2004년 11월에 요코타 메구미 씨의 '유골'로 제공된 것에서 본인의 것과 다른 DNA가 검출되었으며, 그 밖의 피해자에 관해서도 정보 및 물증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는 등 북한의 대응에서는 전혀 성의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2006년 2월, 일본은 북한에 대하여 다시금 생존자의 귀국, 진상규명을 위한 재조사, 납치실행범의 인도 등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2006년 7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하여 일본은 대북조치를 실시하였고, 그 이후에도 같은 해 10월의 핵실험 실시, 2009년 4월의 탄도미사일 발사, 같은 해 5월의 핵실험 실시, 2010년 3월에 일어난 북한의 한국 초계함 공격, 2013년 2월의 핵실험에 대하여 추가적인 조치를 실시했습니다. 북한이 납치문제에 대하여 아무런 성의를 보이지 않은 것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게 된 이유 중 하나입니다.

2014년 5월, 북일 정부 간 협의(개최지:스톡홀름)에서 북한 측은 납치피해자 및 납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행방불명자를 포함한 모든 일본인에 관한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할 의사를 표명하고 같은 해 7월,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조사를 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대북조치의 일부를 해제했습니다.



24년 만에 납치피해자 5명 귀국 (2002년 10월 15일)
사진제공: 산케이신문



납치문제에 관한 동향(연표)

1977년	납치 (4 페이지 ①②③)
1978년	납치 (4 페이지 ④⑤⑥⑦⑧⑨)
1980년	납치 (4 페이지 ⑩⑪)
1983년	납치 (4 페이지 ⑫)
1990년	10월 미하마 사건 (후쿠이현 미하마초에 북한 공작선이 표류해 온 사건)
1997년	3월 '북한 납치피해자 가족연락회 (가족회)' 결성
2001년	12월 규슈 남서해역에서 발생한 괴선박 사건 (해상보안청의 순시선과 충돌전 후 자폭 침몰)
2002년	9월 제 1 회 일조 정상회담, 일조 평양선언에 서명 (평양)
	9~10월 진상조사팀 파견
	10월 납치피해자 5명 귀국
	12월 '북한 당국에 의해 납치된 피해자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 통과
2004년	5월 제 2 회 일조 정상회담 (평양)
	5월 지무라 씨, 하스이케 씨 부부 가족 5명 귀국
	7월 소가 씨 가족 3명 귀국 및 방일
	11월 제 3 회 일조 실무자협의 (평양) ※일본 정부관계자에 의한 현지조사
2005년	9월 6 자회담 공동성명 발표
	12월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최초로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
2006년	4월 납치피해자 가족들과 부시 미국 대통령의 면담
	6월 '납치문제와 기타 북한 당국에 의한 인권침해 문제 대처에 관한 법률' 통과
	7월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7월 대북조치 결정
	7월 유엔 안보리 결의 제 1695 호 채택
	9월 납치문제 대책본부 설치
	10월 북한, 핵실험 실시 발표
	10월 대북 추가조치 결정
	10월 유엔 안보리 결의 제 1718 호 채택
	10월 납치문제 대책본부 제 1 회 회의에서 '납치문제에 대한 향후 대응방안' 결정
2007년	3월 제 1 회 일조 국교정상화를 위한 작업반 회의 (하노이)
	9월 제 1 회 일조 국교정상화를 위한 작업반 회의 (울란바토르)
2008년	6월 일조실무자협의 (베이징)
	8월 일조 실무자협의 (선양) ※북한, 재조사 의사 표명



북한 납치피해자 가족연락회 (가족회) 결성 (1997년)
사진제공: 구출회

2009년	4월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4월 대북 추가조치 결정
	5월 북한, 핵실험 실시
	6월 유엔 안보리 결의 제 1874 호 채택
	6월 대북 추가조치 결정
	7월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7월 대북조치 결정 (유엔 안보리 결의 제 1718, 1874 호 관련)
	10월 납치문제 대책본부 설치 (구 대책본부 폐지)
2010년	3월 북한, 한국 초계함 (천안)호에 어뢰 공격
	5월 대북 추가조치 결정
	11월 북한, 한국 연평도 포격
2011년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2012년	4월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4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 1 위원장 취임
	8월 일조 정부 간 협의 과장급 예비 협의 (베이징)
	11월 일조 정부 간 협의 (울란바토르)
	12월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2013년	1월 유엔 안보리 결의 제 2087 호 채택
	1월 납치문제 대책본부 설치 (구 대책본부 폐지)
	1월 납치문제 대책본부 제 1 회 회의에서 '납치문제 해결을 위한 방침 및 구체적 시책' 결정
	1월 정부·여야 납치문제 대책기관 연락협의회 개최
	2월 북한, 핵실험 실시
	2월 대북 추가조치 결정
	3월 유엔 안보리 결의 제 2094 호 채택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에 관한 유엔 조사위원회 (COI) 설치 결정
	8월 '북한 인권에 관한 유엔 조사위원회 (COI)' 가 아베 총리 예방
2014년	3월 요코타 씨 부부와 김은경 씨 (배구미 씨의 딸) 면회 (울란바토르)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북한 인권에 관한 유엔 조사위원회 (COI)' 최종보고서 정식 제출
	3월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3월 일조 정부간 협의 (베이징)
	4월 납치피해자 가족들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 면담
	5월 제 2 회 북일 정상회담 10주년 기념 후쿠야 납치문제담당대신 담화 발표

2014 년

- 5월 일조 정부간 협의(스톡홀름)에서 북한이 납치피해자 및 납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행방불명자를 포함한 모든 일본인에 관한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조사 실시 약속
- 6월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 7월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 7월 일조 정부간 협의(베이징)
- 9월 북일 외교 당국 간 회의(선양)
- 10월 정부담당자 평양 파견
- 12월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10년 연속)
- 12월 「북한 인권상황」에 관한 안보리 회의 개최

2015 년

- 3월 북한, 탄도 미사일 발사
-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8년 연속)
- 5월 북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수중 발사 시험 발표
- 6월 독일 엘마우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의 공동선언문에 납치문제 명기(2003년 에비앙 정상회의 이후 13년 연속)
- 6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현지 사무소 개설(서울)
- 8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대신과 리수영(李洙墉) 북한 외상 간의 회담 개최(쿠알라룸푸르)
- 8월 비무장지대(DMZ)에서 지뢰 폭발 및 포격 사건 발생
- 9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에 관한 패널 토론회」 개최(제네바)



이즈카 시게오 가족회 대표, 요코타 시게루·사키에 부부가 아베총리 일행과 함께 오바마 대통령과 면담했습니다. (2014년 4월)
사진제공: 내각홍보실

국제사회의 관심 증대

일본과 한국뿐만 아니라 귀국한 일본인 납치피해자 등의 증언을 통해 태국, 루마니아, 레바논 국민 중에도 북한에 납치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명백해졌으며, 북한에서 귀환한 한국인 납치피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중국인 등의 납치피해자도 존재하는 등 북한의 납치문제는 국제사회 전체의 인권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유엔에서도 최근 일본 정부의 강력한 주장에 따라 북한에 대하여 납치피해자의 즉각적 귀국을 포함하여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결의안이 매년 채택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제사회의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2014년 12월 2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인권상황을 포함한 북한 현황과 관련된 첫 회의가 열렸고 이 자리에서 납치문제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습니다.

정상회담 등 국제회의의 성명 등에도 납치문제에 관한 기술이 포함되는 등 이 문제의 해결을 호소하는 일본 정부의 노력은 국제사회의 명확한 이해와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에 관한 유엔 조사위원회(COI) 최종보고서



(제네바에서 개최한 유엔 인권이사회 패널 토론회(2015년 9월))

2014년 3월 17일, 북한 인권에 관한 유엔 조사위원회(COI)는 인권 이사회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같은 해 12월 19일 제69회 유엔 총회(뉴욕)에서 일본 및 EU가 공동 제출한 최종보고서 내용이 반영된 과거 어느 때보다 강력한 내용의 북한 인권상황 결의안이 과반수 찬성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앞서 기술한 인권이사회 결의안과 동일한 내용에 추가적으로 북한의 인권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제재 범위에 관한 검토 등을 통해 적절한 행동을 취할 것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최종보고서의 권고사항에 입각하여 2015년 6월 최종보고서 내용의 후속조치를 목적으로 하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현지 사무소가 한국 서울에 개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종보고서 내용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같은 해 9월 유엔 북한 인권상황 특별보고관의 제안에 의해 납치문제 등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인권이사회의 패널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북한의 의한 납치문제를 포함한 인권침해에 관한 국제심포지엄

2015년 5월 5일, 미국 뉴욕에서 납치문제 대책본부가 주최하는 '북한의 납치를 포함한 인권침해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이 개최되었습니다.

일본은 납치문제의 조기 해결을 포함하여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강력하게 기대하는 한편, 국제사회와의 협력하에 북한에 대하여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것을 지속적으로 강하게 요구할 방침입니다.



뉴욕에서 개최한 국제심포지엄(2015년 5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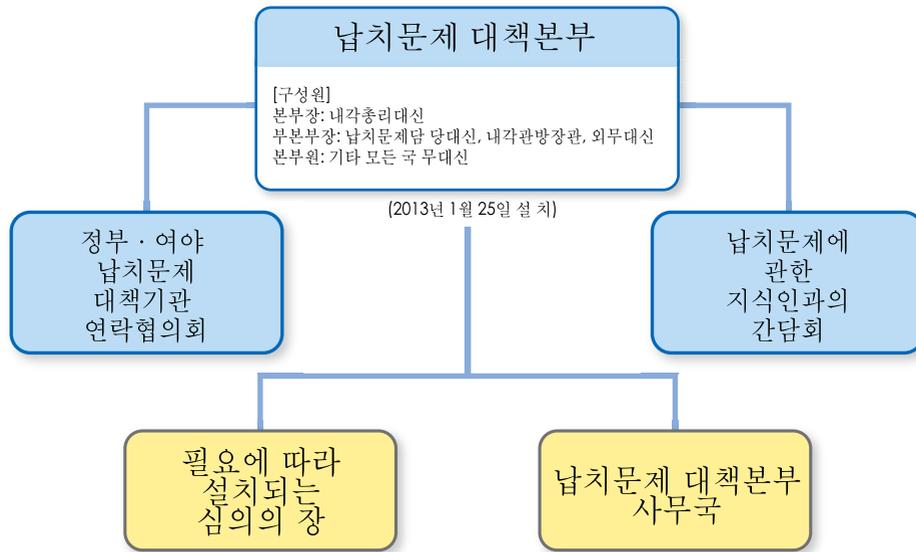
납치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일본 정부의 자세 및 대응체계

일본 정부는 총리대신과 본부장, 납치문제담당대신, 내각관방장관 및 외무대신을 부분부장으로 하고, 모든 국무대신을 구성원으로 하는 납치문제 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책본부에서는 납치문제에 관한 대응방안을 협의하고, 본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전략적 대처 및 종합적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납치문제는 일본의 주권 및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중대한 문제이며, 그 해결 없이 북일 간의 국교정상화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일본 정부는 모든 납치피해자의 하루라도 빠른 귀국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일본 정부에 의한 수사 및 조사

일본 정부가 지금까지 납치피해자로 인정한 17명 이외에도 납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분들이 존재합니다. 일본 정부는 정보수집과 정보수집이나 관련 수사 및 조사를 강력히 추진하는 등 사안의 진상 해명을 위해 노력하고, 모든 납치피해자가 북한에서 신속히 귀국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의 수사 및 조사를 통해 11명의 납치실행범 등을 밝혀내어 현재 국제수배 중에

있습니다. (경시청 홈페이지 <http://www.npa.go.jp/keibi/gaijii1/abduct/index.html>)

납치문제 해결을 위한 방침 및 구체적 시책

방침

북한에 의한 납치문제는 일본의 주권 및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중대한 문제이며, 국가가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할 긴급하고도 중요한 과제이다. 정부로서는 납치문제의 해결 없이 북한과의 국교정상화는 있을 수 없다는 방침을 견지하고, 납치피해자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납치피해자의 안전 확보 및 즉각적 귀국을 위해 전력을 다한다. 또한, 납치에 관한 진상규명, 납치실행범의 인도를 계속적으로 추구하고 나간다.

구체적 시책

위와 같은 방침하에 각 각료는 본부장, 부분부장을 중심으로 긴밀하게 연대하고, 아래 8항목에 관하여 각각의 책임분야에서 전력을 다한다.

- 1 조기해결을 위한 북한 측의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해 추가적인 대응조치를 검토하는 한편, 현행 법 제도하에서의 엄격한 법 집행을 추진한다.
- 2 일조(日朝) 정부 간 협의를 비롯한 다양한 기회를 활용하여 북한 측에 납치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지속적으로 강력히 요구한다.
- 3 납치피해자 및 북한 정세에 관한 정보수집, 분석 및 관리를 강화한다.
- 4 납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안에 관한 수사 및 조사를 철저히 하는 한편, 납치실행범에 관한 국제수사를 포함한 수사 등을 계속적으로 진행한다.
- 5 납치문제가 결코 퇴색되거나 잊혀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교육현장을 포함한 국내지역 각종 및 각종 국제 장소 내의 다양한 장을 활용하여 국내외 여론 계발을 한층 강화한다.
- 6 미국, 한국을 비롯한 관련국과의 긴밀한 공조 및 유엔을 비롯한 다자간 협의를 통하여 국제적인 협조를 더욱 강화한다.
- 7 납치피해자 가족 등에 대한 세심한 대응, 이미 귀국한 납치피해자에 대한 지속적 지원 및 향후 납치피해자 귀국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
- 8 그 밖에 납치문제 해결에 이바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다.

2013년 1월 25일 납치문제 대책본부 결정

[북한 인권침해 문제 계몽주간]

12월 10일~16일

법률로 정해진 이 주간에는
납치문제의 조기 해결을 호소하기 위해 다양한 이벤트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납치문제에 관한 주된 홍보 및 이해촉진 활동

납치문제 대책본부에서는 관련 부처와 공조하여 아래와 같은 홍보 및 이해촉진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납치문제에 관하여 다시금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모든 납치피해자의 한시라도 빠른 귀국을 실현시키기 위한 큰 힘이 됩니다.

- 소책자, 포스터 배포
- 교육현장 등에서의 애니메이션 ‘메구미’ 활용
- 영화 ‘메구미-이산가족의 30년’ 상영
- 만화 ‘메구미’ (외국어판) 배포
- 납치문제 개발 연극 공연 ‘메구미에 대한 맹세 - 탈환 -’ 개최
- ‘납치문제를 알리는 광장’ 설치, 문화축제 등에 터치패널 모니터 대어
- 아동, 학생 등의 취재 접수
- 전시용 납치문제 패널세트 대어
- 국내외 납치문제 심포지엄 개최
- 북한 인권침해 문제 개발주간 동안 콘서트 및 심포지엄 개최
- 각종 연수회, 모임 등에 강사 파견
-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계몽 세미나 개최
- 대북 단파 라디오 프로그램(일본어·한국어) 방송
- DVD ‘납치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제작 및 배포
- 「납치피해자 가족 영상 메시지 ~ 반드시 돌려보내리! 사랑하는 가족 품으로~」 공개 (<http://www.rachi.go.jp>)
- 정부 인터넷 TV ‘반드시 돌려보내리!’ 공개 (<http://nettv.gov-online.go.jp>) 등



AR

저는 이 비디오를 보고 북한에 납치된 요코타 메구미 씨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메구미 씨와 부모님은 무척 힘들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메구미 씨는 혼자 끌려가 무섭고 힘들었을 것이고 부모님도 걱정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메구미 씨를 빨리 일본 가족들 곁으로 돌려보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화목했던 가족의 잃어버린 시간은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잃어버린 시간을 조금이라도 되찾기 위해, 또 옛날처럼 가족들이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한시라도 빨리 가족들 곁으로 돌려보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에는 요코타 메구미 씨 이외에도 북한에 납치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나 그 가족들의 마음은 메구미 씨 가족들과 같을 것입니다. 가족분들이 납치문제에 관한 메시지를 세계로 더욱 퍼뜨려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언젠가 납치된 사람들이 모두 가족들에게 돌아갈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메구미 씨 가족들이 ‘다녀왔어요!’ 라는 말을 들을 수 있게 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애니메이션 ‘메구미’를 본 나가노시의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의 감상문



애니메이션 ‘메구미’

납치문제 Q&A ▶ 10개의 질문에 대답합니다.

Q1 납치문제란 무엇입니까?

1970년대부터 1980년대에 걸쳐 북한은 많은 일본인을 그 의사에 반하여 북한으로 끌고 갔습니다. (납치=본인이 원하지 않는데도 끌고 가는 것)

북한은 오랜 시간에 걸쳐 일본인 납치를 부정했지만 2002년 9월, 북한의 지도자 김정일 국방위 원장(당시)이 고이즈미 총리(당시)와의 회담에서 처음으로 일본인 납치를 인정하고 사죄했습니다. 하지만, 납치된 일본인 중 일본으로 귀국할 수 있었던 것은 고작 5명뿐입니다.

정부는 5명 이외의 납치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귀국을 북한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Q2 북한은 왜 일본인을 납치한 겁니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반도는 한국과 북한으로 분단되었습니다. 북한은 자신들의 주도하에 한 반도를 통일하기 위해 많은 간첩 기관을 설립했다고 합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당시)은 일본인을 납치한 이유를 (1)북한 간첩들에게 일본어를 가르치기 위해, (2)북한 간첩들을 일본인으로 위장시키기 위해, 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Q3 북한은 납치문제가 ‘이미 해결되었다’ 고 주장하는데, 그건 거짓인가요?

지금까지 북한은 납치피해자 중 생존해 있는 사람은 모두 일본으로 귀국시켰고 남은 납치피해자들은 ‘사망’ 또는 ‘북한에 입국한 사실이 없다’ 는 이유를 들어 납치문제는 ‘해결되었다’ 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사망’이라고 설명하는 근거는 극히 부자연스럽고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2014년 5월의 일조 정부 간 협의에 따른 합의에서 북한 측은 ‘종래의 입장은 있으나’ 모든 일본인에 관한 조사를 포괄적이고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최종적으로 납치문제를 비롯하여 일본인에 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바 있으며, 정부로서는 계속해서 모든 납치피해자의 귀국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부 홍보자료 ‘모든 납치피해자의 귀국을 위하여’를 참조해 주십시오.

Q4 일본인 납치피해자는 몇 명이 있나요?

정부가 북한에 의한 납치피해자로 인정한 것은 17명입니다. 이 중 5명은 이미 귀국했지만 남은 12명은 귀국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외에도 행방불명된 일본인 중 납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시며*, 정부는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납치피해자를 한시라도 빨리 귀국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납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안으로서, 행방불명자 877명(2015년 10월 1일 현재)에 관하여 국내외에서의 정보수집, 수사 및 조사를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Q5 북한은 납치를 인정했는데, 왜 아직 귀국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건가요?

납치피해자가 일본으로 귀국함으로써 간첩 활동 등 북한에 불리한 사실들이 밝혀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김현희 북한공작원은 1987년 11월, 일본인으로 위장하여 한국의 항공기를 폭파했습니다. 김현희 전 공작원은 납치피해자(다구치 야에코 씨)로부터 일본어 교육을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 사건에 대한 관여를 아직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사실이 명백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여 다구치 씨를 귀국시키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Q6 어떻게 되면 납치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납치문제의 해결에는 아래의 3가지가 실현되어야 합니다.

먼저, 모든 납치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즉시 귀국시킬 것.

그리고 북한이 납치피해의 진상을 명백히 밝힐 것.

나아가 북한이 납치를 실행한 자들을 일본으로 인도할 것.

Q7 납치문제의 해결을 위해 일본 정부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일본은 북한에 대해 납치문제의 해결을 위해 힘쓰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며, 예를 들면 북한과의 수출입을 금지하는 등 북한에 대하여 다양한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국 간 회담이나 국제회의 등의 기회를 통하여 각국에 이해와 협력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납치피해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또한, 납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분들의 수사 및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Q8 일본 정부는 납치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북한과 경제협력을 할 생각입니까?

정부는 납치문제의 해결에 대한 교환조건으로 북한에 지원을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일조 간의 최대 현안인 납치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이 해결되고 일조 국교정상화가 실현 되면, 일조 평양선언에 따라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실시하게 됩니다.

Q9 납치문제를 국제사회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2014년 2월에 발표된 북한의 인권에 관한 유엔 조사위원회(COI) 최종보고서에서는 북한에 의한 납치사건 피해자의 출신 국가가 일본 이외에도 한국, 레바논,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루마니아,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중국 등 여러 국가에 이르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납치문제는 피해자가 있는 국가의 여부를 떠나 국제적으로 추궁해야 할 인권문제이며 2014년 12월 유엔 총회에서 COI 보고서 내용에 기초한 결의안이 과반수 찬성으로 채택된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제사회는 납치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북한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Q10 납치문제의 해결을 위해 우리 국민이 할 수 있는 일은 될까요?

지금까지 1,000만 명이 넘는 국민들로부터 납치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서명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으로부터 납치를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는 강한 결의가 표명되었다는 것은 이 문제의 해결에 있어 커다란 힘이 됩니다.

우선은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COCOAR]

다운로드(무료)



AR 마크가 붙은 화상을 스마트폰으로 훑으면

콘텐츠가 표시됩니다. App Store, Google Play로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고 기동한 뒤 훑어 주십시오.

혈육과의 상봉을 간절히 기다리는 고령자 가족들의 애달픈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 북한에서 오랜 세월 구출만을 기다리고 있는 납치피해자분들의 고충을 생각하면 더 이상 한시도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는 아베 정권의 최중요 과제이며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모든 납치피해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귀국하여 기다리는 가족들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2015년 10월

납치문제담당대신 가토 가쓰노부

납치문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납치문제

Q 검색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rachi.go.jp/kr/>

납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납치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계신 분이나 문의 및 자료를 청구하실 분들은 납치문제 대책본부 사무국으로 이메일 또는 FAX를 통해 연락 주십시오.

- 이메일 주소 >>> g.rachi@cas.go.jp

- FAX >>> 03-3581-6011

문의처

내각관방 납치문제 대책본부 사무국

(우)100-8968 도쿄도 지요다구 나가타초 1-6-1

TEL +81(0)3-3581-8898 FAX +81(0)3-3581-6011

2015년 10월 발행

이 책자에는 AR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15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